



보도 일시	2022. 12. 26.(월) 09:50	배포 일시	2022. 12. 26.(월) 08:00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고재신 (044-215-5510)
		담당자	사무관 송윤주 (teruwith@korea.kr)
			사무관 가순봉 (07nmuser@korea.kr)

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

-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-
- '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-

□ 공공기관 정원 △12,442명(공공기관 전체 정원 44.9만명의 △2.8%) 조정 계획

* ①감축 △17,230명(△3.9%) : 기능조정 △7,231명 조직·인력 효율화 △4,867명 정·현원차 △5,132명
②재배치 +4,788명(+1.1%)

- ①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, ②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,
③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

□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「공공기관 혁신T/F」 검토, 각 주무부처·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(12.26)

□ 기획재정부는 '22.12.26.(월)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「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」을 상정·의결하였음

[그간의 경과]

□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①공공부문 생산성 제고, ②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, ③민간-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

- * ① 「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」(6.30),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(7.29)
- ② 「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」(8.18), ③ 「민간-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」(9.23)

□ 「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」(7.29)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①기능, ②조직·인력, ③예산, ④자산, ⑤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중이고,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*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**(10.17), 자산효율화 계획*** (11.11)을 기 확정·발표하였음

* '22~'23년 경상경비 △1.1조원 절감 및 삭감 / **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

***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.5조원 매각·정비

□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「혁신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완료(9.8)하였으며, 정부는 민관합동 「공공기관 혁신T/F」를 구성·운영하여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·검점하고, 주무부처·기관과 협의·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

- 금일 공운위에서 「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」이 확정됨에 따라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음

[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]

□ 금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△12,442명*(공공기관 전체 정원 44.9만명의 △2.8%)을 조정하기로 하였음

* 연도별 정원조정 규모 : ('23년) △11,081명, ('24년) △738명, ('25년) △623명

- 이는 △17,230명(전체 정원대비 △3.9%)을 감축하고, 4,788명(1.1%)을 국정과제 수행,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것임

□ '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*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, 공공기관 정원은 '22년 44.9만명 → '23년 43.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임

* 기관 통폐합, 기능조정, 경영효율화 등 추진하여 '08년 26.2만명 → '09년 24.3만명으로 감소

< '08~'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>



□ 유형별로는 ❶기능조정 △7,231명, ❷조직·인력 효율화 △4,867명, ❸정·현원차 축소 △5,132명, ❹인력 재배치 +4,788명이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❶ (기능조정) 민간·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,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, 기관간 유사·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△7,231명을 조정

▪ (민간 경합)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
→ 84개 기관, 167건 조정

- (한국체육산업개발) 분당·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('94년~)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
- (한국전기안전공사)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하여 민간부문 정상화*
* 전기안전관리법, 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(산업부)에 따라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 예정, 다만, 농어촌,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

▪ (지자체 경합)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, 해당 기능을 축소 → 20개 기관, 33건 조정

- (한국농어촌공사) 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(도시재생, 도로개설, 마을 하수도 정비)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
- (한국문화재단)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('07년부터 탐방 안내소 6개 등 운영 중)을 문화재단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 추진

▪ (비핵심 업무)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·업무를 축소 → 109개 기관, 221건 조정

- (한국조폐공사) 핵심기능(은행권,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)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,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 폐지
- (한국전력공사) 청경, 검침 등 현장인력을 운영했으나,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관련 기능 이관

▪ (수요감소·사업종료) 시장수요 감소,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을 축소 → 121개 기관, 242건 조정

- (한국도로공사서비스)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·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
- (대한석탄공사)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 축소

▪ (유사·중복) 공공기관간 유사·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
→ 24개 기관, 54건 조정

- (한국환경공단) 타 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, 화학물질 등록지원,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
- (한국국토정보공사)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·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

❷ (조직·인력 효율화) 조직통합·대부서화, 지방·해외조직 효율화, 지원인력 조정,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△4,867명 조정

▪ (조직통합·대부서화)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, 관리체계 광역화 등 추진 → 130개 기관

- (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) 업무 통합이 가능한 2개 부서(사회적가치추진실, 성과혁신실)를 통합하고, 관련 인력을 효율화
- (국방기술품질원) 타 부서 및 상위 부서와 업무·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(62→54개)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▪ (지방·해외조직 효율화)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, 해외지사 등 효율화 추진 → 40개 기관

- (한국관광공사)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지사 3개소(튀르키예 이스탄불, 중국 시안·우한)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(부산·울산+경남, 경인+강원) 통합
- (그랜드코리아레저)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 마케팅팀을 축소하고,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 축소(6→4개소)

▪ (지원인력 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) 기획·인사·홍보·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, 디지털화, 업무 자동화 등 추진 → 167개 기관

- (한국장학재단) 경영지원, 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, 업무 통합 등 추진
- (근로복지공단)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·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 제고

- (상위직급 축소)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,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 → 61개 기관

• (기술보증기금) 유사 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원수를 축소(8→7명)
 * 기술보증기금 : 임원 8명, 임직원 1.6천명 / 신용보증기금 : 임원 7명, 임직원 3천명
 • (한국콘텐츠진흥원)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(6명)을 운영하고 있었으나, 채용기준·역할 등이 타 직급(G1)과 구별되지 않아 G1직급으로 조정

- ③ (정·현원차 축소) 육아휴직,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·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△5,132명을 축소

* 한국도로공사서비스(주) △971명, 한전MCS(주) △440명, (재)우체국시설관리단 △417명, 코레일로지스(주) △296명, 한국마사회 △190명

- ④ (인력 재배치) 핵심 국정과제 수행, 필수시설 운영, 안전, 법령 제·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,788명을 재배치

• 국정과제 : 한수원 신한울 3,4호 건설,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,577명
 • 필수시설 운영 :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,056명
 • 안전 분야 :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,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
 • 법령 제·개정 :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·금융교육 수행 등 282명

[주요 특징]

- ① (기관·부처 협의) 금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, 민관 합동 「혁신T/F」 검토, 주무부처·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
 - 각 주무부처는 「소관기관 혁신T/F」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·조정하여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, 기재부는 「공공기관 혁신T/F」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, 「혁신T/F」안에 대해 각 부처·기관과 적극적인 의견조치 및 협의를 실시하였음

- ② (기관별 특성 반영) 기능·조직,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

○ 특히, 공공병원·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하여,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(공공병원),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·현원차 축소(연구개발목적 기관) 중심으로 조정하였음

- ③ (안전인력 강화) 안전인력 감축은 없고,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

○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(80명)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,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*

* (전기안전공사)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(251명), (철도공사)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(78명), (승강기안전공단)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(43명) 등

- ④ (일반·무기직간 균형)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%, 무기직은 40% 수준

○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·현원차 조정으로써,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음

* 직군별 정원감축 규모 및 비율 : (일반직)△7,448명(59.9%), (무기직)△4,994명(40.1%)

- ⑤ (신규채용 영향 최소화)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·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, 향후 2~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,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임

[기대 효과]

- 금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·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,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
- 아울러,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,600억원*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

* 실제 현원이 아닌 최대 정원기준 인건비 절감효과(정원조정수 × '22년 평균보수)

[향후 일정]

□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, 이에 따라 '22년말~'23년초에 '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'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

□ 정부는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*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운위에 보고하고,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

* ①기능조정, ②조직·인력 효율화, ③예산 절감, ④자산 효율화, ⑤복지후생 개선

□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가겠음

	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	책임자	과 장 정유리 (044-215-5530)
		담당자	사무관 안기용 (giyongah@korea.kr)
	재무경영과	책임자	과 장 육현수 (044-215-5630)
		담당자	사무관 권기환 (kkhpark@korea.kr)
	평가분석과	책임자	과 장 김유정 (044-215-5550)
		담당자	사무관 이희한 (lihan423@korea.kr)
	인재경영과	책임자	과 장 이복원 (044-215-5570)
		담당자	사무관 이승민 (top9412@korea.kr)
	윤리경영과	책임자	과 장 김수영 (044-215-5620)
		담당자	서기관 이재석 (y889527@korea.kr)
	공공혁신과	책임자	과 장 오정운 (044-215-5610)
		담당자	사무관 박준하 (joonha@korea.kr)
	경영관리과	책임자	과 장 김의영 (044-215-56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정수 (kjs0813@korea.kr)



참고 1

공기업 정원조정 계획안

(단위 : 명, %)

	기관명	기존 정원	조정규모 (조정율)		① 기능 조정	② 조직·인력 효율화	③ 정·원원차 조정	④ 재배치
1	한국철도공사	32,508	△722	(△2.2%)	△621	△801	△144	844
2	한국전력공사	23,728	△496	(△2.1%)	△83	△527	-	114
3	한국수력원자력(주)	12,821	△37	(△0.3%)	△212	△159	-	334
4	한국도로공사	9,166	△188	(△2.1%)	△209	△67	△92	180
5	한국토지주택공사	8,991	△220	(△2.4%)	△156	△64	-	-
6	한전KPS(주)	6,712	△87	(△1.3%)	△30	△26	△61	30
7	한국수자원공사	6,584	△221	(△3.4%)	△151	△17	△67	14
8	한국가스공사	4,320	△102	(△2.4%)	△7	△101	△30	36
9	(주)강원랜드	3,778	△90	(△2.4%)	△15	△8	△79	12
10	한국마사회	3,175	△373	(△11.7%)	△100	△108	△190	25
11	한전KDN	3,040	△28	(△0.9%)	△7	-	△21	-
12	한국남동발전(주)	2,929	△87	(△3.0%)	△5	△91	△27	36
13	한국중부발전(주)	2,898	△91	(△3.1%)	△5	△79	△37	30
14	한국서부발전(주)	2,842	△77	(△2.7%)	△9	△167	△26	125
15	한국공항공사	2,762	△59	(△2.1%)	△3	△46	△15	5
16	한국남부발전(주)	2,738	△68	(△2.5%)	△8	△82	-	22
17	한국동서발전(주)	2,585	△80	(△3.1%)	△5	△68	△30	23
18	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	2,417	△85	(△3.5%)	△41	△33	△15	4
19	(주)한국가스기술공사	2,265	△23	(△1.0%)	△11	△8	△14	10
20	한국지역난방공사	2,186	△80	(△3.7%)	△48	△71	-	39
21	인천국제공항공사	1,967	△37	(△1.9%)	△17	△15	△8	3
22	그랜드코리아레저(주)	1,827	△55	(△3.0%)	-	△41	△14	-
23	한국조폐공사	1,517	△118	(△7.8%)	△67	△51	-	-
24	한국석유공사	1,454	△47	(△3.2%)	△68	△31	△13	65
25	한국부동산원	1,181	△26	(△2.2%)	△7	△1	△18	-
26	주택도시보증공사	1,063	△23	(△2.2%)	△23	-	-	-
27	한국광해광업공단	808	△23	(△2.8%)	△49	-	-	26
28	해양환경공단	747	△34	(△4.6%)	△10	△10	△19	5
29	주식회사 에스알	686	△27	(△3.9%)	△10	△27	-	10
30	대한석탄공사	655	△139	(△21.2%)	△139	-	-	-
31	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	385	△32	(△8.3%)	△36	△12	△3	19
32	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	317	△15	(△4.7%)	△13	△6	-	4
33	인천항만공사	289	△15	(△5.0%)	△3	△2	△12	2
34	부산항만공사	284	△15	(△5.3%)	△7	△5	△5	2
35	여수광양항만공사	177	△9	(△5.1%)	△3	△7	△1	2
36	울산항만공사	129	△6	(△4.7%)	△3	△4	-	1

참고 2

준정부기관 정원조정 계획안

(단위 : 명, %)

	기관명	기존 정원	조정규모 (조정율)		① 기능 조정	② 조직·인력 효율화	③ 정·현원차 조정	④ 재배치
1	국민건강보험공단	19,114	△343	(△1.8%)	△174	△96	△86	13
2	근로복지공단	10,244	△200	(△2.0%)	△119	△20	△61	-
3	국민연금공단	7,596	△152	(△2.0%)	△112	△122	△21	103
4	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7,570	△189	(△2.5%)	△167	△39	△17	34
5	한국농어촌공사	6,748	△239	(△3.5%)	△169	△70	-	-
6	한국국토정보공사	4,704	△154	(△3.3%)	△127	-	△44	17
7	건강보험심사평가원	4,032	△89	(△2.2%)	△73	△12	△58	54
8	한국환경공단	3,316	△144	(△4.3%)	△51	△12	△100	19
9	한국전기안전공사	3,237	△158	(△4.9%)	△398	△53	-	293
10	도로교통공단	3,112	△97	(△3.1%)	△23	△35	△49	10
11	신용보증기금	2,948	△64	(△2.2%)	△10	△10	△64	20
12	국립공원공단	2,674	△135	(△5.0%)	△80	△20	△36	1
13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2,250	△28	(△1.2%)	△67	△24	△31	94
14	국가철도공단	2,224	△40	(△1.8%)	△36	△16	△8	20
15	한국산업인력공단	1,911	△39	(△2.0%)	-	△64	△30	55
16	한국교통안전공단	1,898	△55	(△2.9%)	△48	△7	-	-
17	한국자산관리공사	1,846	△21	(△1.1%)	△19	△33	-	31
18	한국가스안전공사	1,758	△49	(△2.8%)	△43	△17	△24	35
19	한국승강기안전공단	1,663	△9	(△0.5%)	△27	△16	△9	43
20	국민체육진흥공단	1,646	△172	(△10.4%)	△91	△19	△65	3
21	기술보증기금	1,589	△33	(△2.1%)	△26	△13	-	6
22	(재)우체국물류지원단	1,564	△87	(△5.6%)	△4	△3	△82	2
23	한국장애인고용공단	1,494	△48	(△3.2%)	△83	△5	-	40
24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1,476	△53	(△3.6%)	△18	△3	△45	13
25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1,295	△35	(△2.7%)	△27	△80	△25	97
26	국토안전관리원	1,046	△11	(△1.1%)	△31	△1	-	21
27	한국주택금융공사	1,021	△24	(△2.4%)	△8	△6	△14	4
28	한국연구재단	988	△20	(△2.0%)	△5	△2	△18	5
29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923	△34	(△3.7%)	△8	△50	-	24
30	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	921	△23	(△2.5%)	△17	△21	△5	20
31	에금보험공사	868	△34	(△3.9%)	△51	△8	△4	29
32	(재)우체국금융개발원	868	△21	(△2.4%)	△20	△22	-	21
33	한국무역보험공사	804	△10	(△1.2%)	-	△16	△6	12
34	한국인터넷진흥원	790	△18	(△2.3%)	△11	△21	△8	22
35	한국관광공사	773	△16	(△2.1%)	△8	△14	-	6
36	한국에너지공단	756	△15	(△2.0%)	△6	△14	-	5
37	한국사회보장정보원	740	△13	(△1.8%)	△15	-	△2	4
38	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	721	△12	(△1.7%)	△11	△7	△4	10
39	한국환경산업기술원	690	△26	(△3.8%)	△4	△15	△24	17
40	공무원연금공단	687	△17	(△2.5%)	△5	△10	△9	7
41	국립생태원	650	△27	(△4.2%)	△6	△16	△13	8
42	한국산업단지공단	650	△20	(△3.1%)	△16	△3	△11	10
43	한국국제협력단	604	△13	(△2.2%)	△9	△6	△10	12
44	한국전력거래소	561	△22	(△3.9%)	△2	△6	△14	-
45	한국소비자원	561	△19	(△3.4%)	△11	△18	-	10

	기관명	기존 정원	조정규모 (조정율)		① 기능 조정	② 조직·인력 효율화	③ 정·현원차 조정	④ 재배치
46	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	557	△17	(△3.1%)	△8	△13	△6	10
47	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	550	△10	(△1.8%)	△5	△10	△3	8
48	한국장학재단	541	△26	(△4.8%)	△20	△12	△19	25
49	한국콘텐츠진흥원	533	△14	(△2.6%)	△4	△5	△10	5
50	(재)한국우편사업진흥원	531	△27	(△5.1%)	△1	△23	△3	-
51	정보통신산업진흥원	513	△10	(△1.9%)	△6	△14	△4	14
52	한국고용정보원	510	△20	(△3.9%)	△20	△6	-	6
53	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	484	△32	(△6.6%)	△32	△17	-	17
54	한국산림복지진흥원	477	△24	(△5.0%)	△25	△25	-	26
55	축산물품질평가원	476	△19	(△4.0%)	-	△18	△4	3
56	한국석유관리원	462	△14	(△3.0%)	△6	△8	-	-
57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	442	△13	(△2.8%)	-	△11	△7	5
58	한국보건산업진흥원	423	-	-	△2	-	-	2
59	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	416	△23	(△5.5%)	△16	△22	-	15
60	한국원자력환경공단	413	△5	(△1.2%)	-	△6	-	1
61	한국산업기술진흥원	410	△10	(△2.4%)	△4	△3	△6	3
62	한국보육진흥원	371	△4	(△1.1%)	-	-	△4	-
63	한국수산업원공단	361	△17	(△4.7%)	△3	△13	△2	1
64	한국교육학술정보원	353	△13	(△3.7%)	△2	△5	△12	6
65	한국농업기술진흥원	343	△19	(△5.5%)	△15	△7	△13	16
66	한국수방산업기술원	329	△13	(△4.0%)	△6	△7	-	-
67	서민금융진흥원	328	△7	(△2.1%)	△9	△10	△6	18
68	한국재정정보원	326	△28	(△8.6%)	△13	△15	-	-
69	한국해양수산연수원	304	△12	(△3.9%)	△6	△12	-	6
70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297	△5	(△1.7%)	△3	△7	△2	7
71	한국보건복지인재원	279	△5	(△1.8%)	△4	-	△5	4
72	한국임업진흥원	274	△9	(△3.3%)	△14	△9	-	14
73	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	269	△9	(△3.3%)	△3	△9	-	3
74	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	268	△10	(△3.7%)	△7	△2	△3	2
75	시청자미디어재단	267	△7	(△2.6%)	△4	△7	-	4
76	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	255	△6	(△2.4%)	-	△6	-	-
77	한국특허전략개발원	249	△8	(△3.2%)	△8	△2	△1	3
78	창업진흥원	245	△12	(△4.9%)	△7	△17	-	12
79	국제방송교류재단	229	△3	(△1.3%)	△1	△7	-	5
80	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	224	△4	(△1.8%)	△13	-	-	9
81	한국언론진흥재단	219	△6	(△2.7%)	△3	△6	-	3
82	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	191	△1	(△0.5%)	-	△2	-	1
83	한국건강가정진흥원	187	△7	(△3.7%)	-	△7	-	-
84	한국디자인진흥원	187	△6	(△3.2%)	△6	△1	△6	7
85	한국과학창의재단	184	△4	(△2.2%)	-	△4	-	-
86	한국노인인력개발원	183	△3	(△1.6%)	△7	-	-	4
87	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	180	△8	(△4.4%)	△9	△6	△2	9
88	한국기상산업기술원	175	△12	(△6.9%)	△2	△16	-	6
89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175	△5	(△2.9%)	△2	△5	△2	4
90	한국건강증진개발원	165	△1	(△0.6%)	-	△4	-	3
91	독립기념관	157	△7	(△4.5%)	△8	△1	-	2
92	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155	△3	(△1.9%)	△5	-	-	2
93	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	101	△5	(△5.0%)	△3	△2	△1	1
94	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	100	△3	(△3.0%)	△1	△1	△1	-

참고 3

기타공공기관 정원조정 계획안(300인 이상, 병원·출연연 제외)

(단위 : 명, %)

	기관명	기존 정원	조정규모	(조정율)	① 기능 조정	② 조직·인력 효율화	③ 정·현원차 조정	④ 재배치
1	중소기업은행	13,965	△390	(△2.8%)	△36	△186	△168	-
2	한국도로공사서비스	6,317	△1,041	(△16.5%)	△421	-	△971	351
3	코레일테크(주)	5,395	△127	(△2.4%)	△42	△1	△85	1
4	한전MCS(주)	4,973	△612	(△12.3%)	△143	△29	△440	-
5	한국산업은행	3,406	-	-	-	-	-	-
6	주택관리공단(주)	2,777	△72	(△2.6%)	△175	-	-	103
7	학교법인한국폴리텍	2,756	△27	(△1.0%)	△20	-	△7	-
8	(재)우체국시설관리단	2,709	△445	(△16.4%)	△28	△1	△417	1
9	코레일네트웍스(주)	1,916	△236	(△12.3%)	△170	△12	△58	4
10	한국체육산업개발(주)	1,468	△288	(△19.6%)	△271	△2	△15	-
11	코레일관광개발(주)	1,403	△101	(△7.2%)	△14	△7	△80	-
12	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	1,276	△8	(△0.6%)	△37	-	△8	37
13	한국수출입은행	1,249	△27	(△2.2%)	△22	△5	-	-
14	한전원자력연료(주)	1,184	△14	(△1.2%)	-	△7	△10	3
15	대한법률구조공단	892	△23	(△2.6%)	-	△3	△23	3
16	코레일로지스(주)	839	△296	(△35.3%)	-	-	△296	-
17	한국기술교육대학교	646	△7	(△1.1%)	△1	△5	△4	3
18	코레일유통(주)	507	△30	(△5.9%)	△30	-	-	-
19	한국특허정보원	429	△6	(△1.4%)	△13	-	-	7
20	(주)공영홈쇼핑	400	△18	(△4.5%)	-	△1	△17	-
21	한국문화재단	397	△9	(△2.3%)	△8	△2	-	1
22	한국장애인개발원	397	△10	(△2.4%)	-	△6	△10	6
23	예술의전당	393	△10	(△2.5%)	-	-	△10	-
24	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	391	△8	(△2.0%)	-	△16	-	8
25	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	361	△16	(△4.4%)	△5	△12	△12	13
26	한국투자공사	327	△10	(△3.1%)	-	△10	-	-
27	노사발전재단	304	△4	(△1.3%)	-	△1	△8	5